



## 세무·회계·경영(TAM) 쟁점뉴스 요약

###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접속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의료비를 추가 수집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사용액 중 30%가 소득 공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사업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5월 소득세 신고를 신고할 때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지난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다가, 2014년부터 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이후 과세형평성을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대상자로 자체 분석된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중 주택임대사업자는 100만명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63만명, 복식부기의무자는 14만명이다.

안내문 분실을 방지하고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하는 한편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 말 많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R&D 세액공제 제도란 과학적 진전이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조세지원 제도로 매년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R&D 세액공제가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세액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홍보, 영업, 고객대응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제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사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 등이다. 이 사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전심사는 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R&D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며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R&D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